

노동부, 퇴직연금 노후자금화 촉진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 단계적 확대

내달 중 퇴직급여법 개정안 마련
연금형태 지급 전환 ‘옵트아웃’ 추진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 구체화한 것”

퇴직금을 한꺼번에 다 받겠다는 의사를 퇴직 전 미리 표하지 않을 시 연금 형태의 지급으로 자동 전환된다. 또 현재 급전이 절실한 퇴직자의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한 반면, 향후 원금은 그대로 놔둔 채 이를 담보로 한 대출상품 가입이 권고된다. 후년부터는 100명 이상 사업장 모두가 퇴직연금의 사외 적립(은행·증권·보험사 등 외부 민간금융회사에 맡김) 의무를 지닌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장기 적립을 통해 노후 자금으로 연결되는 연금수령 방식을 촉진하는 방침이다.

우선 담보대출을 활성화한다. 현행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주거·의료비 등 긴급한 사유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노동부는, 개선 방향으로 담보 대출 상품 출시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에는 담보제공 한도 확대(현행 50→향후 70% 등)를 허용하는 동시에 융자 상환 불이행에 대한 압류 권한도 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 두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용한다.

현재 퇴직자는 퇴직급여 지급 시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앞으로는 연금 형태의 수령 촉진을 위해, 사전에 일시금 수령의 의사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연금으로 지급되는 이른바 옵트아웃(opt-out: 선 실행, 후 거부) 방식의 도입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현재 연금성이 미흡하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직·퇴직과 주택 매입 등 현실적 수요로 인해 연금수령(만 55세) 이전 중도 활용 선호가 지속되면서 노후준비 지연의 위험성이 있다”고 전했다.

퇴직연금의 사외 적립 의무도 확대된다. 2028년 1월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사내가 아닌 사외(금융회사)에 직원 퇴직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어 99~10

인 사업장은 2029년 1월1일부터, 10인 미만은 2030년 1월1일부터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이러한 내용의 정부발 개정안은 11월 중 세부안이 마련되고 12월 국회 통과가 시도된다.

노동부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당정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도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고 했다.

또 “지난 2월6일 퇴직연금에 대한 최초의 노사정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이번 방안은 노사정 공동선언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축평원, AI 기반 계란 품질평가 기술 고도화

박수진 원장 “축산유통 현장 개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인공지능(AI) 기반의 계란 품질평가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계란 선별기와 연계해, 실시간으로 등급판정이 가능한 AI 기술 개발에 나선다. 난각에 품질등급(1+·1·2) 표시를 활성화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축평원은 품질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품질분석 데이터 활용의 기반 마련을 위해 AI 기반 품질평가 장비를 개발·도입해 왔다.

기존 계란 판정은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육안 검사에 따라 진행되던 반면, 계란 품질평가 장비는 AI 분석을 통해 외관·파각(깨짐)에 대한 수준을 측정한다. 외관은 AI 비전 측정을 통해 항목·수준별 분석을 진행한다. 파각(깨짐) 유무는 AI가 투광 판정 이미지를 분석해 확인한다.

이 장비는 지난해 개발이 완료됐다. 현재 경기 평택에 위치한 YJ푸드에서 실제 등급판정에 활용하고 있다. 판정의 객관성 및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축평원은 AI 장비를 통해 축적한 판정



데이터를 통계·분석해, 농가와 유통 현장에 제공하는 피드백 모델도 구축하고 있다. 계란 집란·취급 과정의 개선을 지원해 농가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고품질 계란의 유통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올해 계란 집하장(GP) 10개소에 AI 기반 계란 품질평가 기술이 탑재된 장비를 추가로 보급했다. 2030년까지 52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실시간 등급판정이 가능한 AI 기술의 개발도 추진한다. 아울러 품질등급(1+·1·2)을 매긴 후 계란 껍데기에 표시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사진)은 “AI 기반 계란 품질평가는 국민에게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축산물 품질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AI와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생산자와 유통업체,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축산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김연세 기자

공정위, 셀트리온 하도급법 위반 제재

부당한 위탁취소 등 과징금 6.3억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판매 기업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 위탁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셀트리온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수천만 개에 달하는 물량을 임의로 취소하고, 계약변경 서면조차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9일 셀트리온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및 부당한 위탁취소 등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총 6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7차에 걸쳐 수급사업자에게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셀트리온은 전문가용(POC)과 개인용(OTC) 간의 품목 변경을 수차례 진행했음에도 법정

서면을 아예 발급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가 이미 작업에 착수한 후에야 뒤늦게 서면을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특히 지난 2022년 12월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해지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아직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총 3717만 개(2차 발주 중 186만 개, 7차 발주 중 3531만 개)의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4000만 원,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위반 행위에 5억 9000만 원 등 총 6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변경계약에 대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 서면을 지연 발급한 행위, 부당하게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제제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석유공사, 유전 생산예측 AI 모델 개발

공공기관 AI 혁신 챌린지 수상
해외 유전 생산성 극대화 기대

한국석유공사가 대규모 해외 유전 생산데이터를 학습한 생산예측 AI(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석유공사 보유 해외 생산유전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공사는 지난 28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26 공공기관 AI 혁신 챌린지’에서 AI 혁신상(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AI 실증·PoC(개념 검증) 부문’에 ‘AI로 극복하는 고유가 위기: 지능형 해외유전 생산관리 자동화 실증’ 과제로 참가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석유공사 기술센터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무를 총괄했으며, 인하대학교가 산학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석유공사-인하대 공동 연구진은 캐나다 오일샌드 생산유전 17개 유전에서 축적된 8년 치의 방대한 생산 자료, 약 461만 건에 달하는 빅데이터를 학습한 오일샌드 유전 생산예측 AI 모델을 자체 개발했다.

오일샌드 유전은 점성이 매우 높은 초중질유(비투멘)가 모래와 섞여 있어 그대로 채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지하에 고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8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26 공공기관 AI 혁신 챌린지’에서 AI 혁신상(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석유공사

온의 스팀을 강제로 주입해 유동성을 높인 뒤 채유하는 방식을 쓴다. 문제는 현장의 스팀 공급 설비 용량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한정된 스팀을 어떤 유정에, 얼마나 배분하느냐에 따라 전체 생산성이 완전히 갈리게 된다.

이번에 개발된 AI 모델은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유정별 원유 생산량을 정확히 예측한다. 아울러 수많은 스팀 주입 시나리오 가운데 원유 증산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배분안’을 신속히 찾아낸다. 수동 제어나 단순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정밀 제어가 가능해진 셈이다.

연구팀은 오는 11월 캐나다 현지 유전에서 해당 AI 모델 시범운영에 도입할 예

정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내년부터는 캐나다 현장은 물론 석유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타 해외 생산유전으로 단계적 확장 적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추가 투자비 없이 해외 생산유전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기존 고가의 해외 상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서 벗어나 자원개발 AI 역량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공사가 자체 개발한 오일샌드 유전 생산 예측 AI 모델이 공공기관 혁신 서비스 성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AI 모델의 현장 적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에너지안보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가스공사-iM뱅크, 600억 상생펀드 운용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한국가스공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8일 대구 수성구 iM뱅크 본사에서 iM뱅크와 ‘더 좋은 지역 경제를 위한 상생펀드 업무 협약’을 갱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흥익락 가스공사 시장과 강정훈 iM뱅크 은행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사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운영해 온 2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이번 협약을 통해 600억 원 규모로 3배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펀드는 가스공사와 iM뱅크가 각각 300억 원씩 출자하는 1대1 매칭 방식으로 조성되며,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자금 대출로 활용된다.

이번 상생펀드 협약으로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실질적인 유동성 확보와 경영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효성 높은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추진해 대구 이전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중소기업 모두가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